

‘강운태 드라이브’ 제동 걸리나

윤봉근 시의장 “일방 정책 결정” 반발...노조 “공무원 인권 침해” 반기

광주시 간부들尹의장 발언 유감 표명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이 20일 제 190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라는 공식석상에서 강운태 광주시장의 시정운영 방향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광주시 고위간부들이 유감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출범한 지 한 달도 안 돼 민선 5기 광주시 집행부와 광주시의회 의회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향후 각종 정책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윤 의장은 이날 오전 제190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은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표방하며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가고 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최근 상무소각장 이전과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 야구장 건설, 관광레저타운 조성 등 급격한 지역현안 사업들이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이고 임기응변식으로 발표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일부 조정 기능을 맡아야 할 의장이 그런 발언을 한데 대해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민선 5기 광주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윤 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부 간부진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광주시 한 국장은 “서로 고민하고 격려해도 부족할 판국에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는 단체장을 공식석상에서 비판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되물기도 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공무원노조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선 5기 들어 개방형 임용직위 대폭확대, 취임후 정례조회서 근거 잡기, 인수위 실세의 시책교육, 딱지 찢기 동원, 소통 없는 일방적 간부회의, 하향식 정책결정 등에 따른 조직의 경직성과 직원의 피로감이 지방정권교체 초기임을 감안하더라도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190회 제2차 임시 본회의장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윤봉근 시의회 의장이 밝게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강 시장은 이날 첫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을 찾았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또 “아무리 하고 싶은 정책일지라도 결정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책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중요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강운태 시장의 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20여 년 전의 사고에 갇혀있는 듯 하다”며 “시장의 말 한마디로 6000여 공무원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인권이 침해받는 시스템에서 과연 소통의 공동체, 세계적 인권의 도시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시민의 행복에 지향점을 두고 공직자들의 경직된 사고의 혁신을 촉구하고 있는 강 시장에 대한 사실상의 ‘반기’인 셈이다.

이 같은 윤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광주시 고위간부들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 간부진은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이 시민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기준으로 두고 광주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데, 이 같은 노력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집행부와 의회 간 균형각각을 갖고

시장과 조직운영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시의회와 공무원노조가 같은 날 표명한 강도 높은 비판에 강 시장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집행이 보류됐던 F1(포물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 지원예산 528억원이 7개월 만에 집행되게 됐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예산에 편성되고 그동안 여러 문제로 집행이 보류됐던 F1 예산 528억원이 전남 문화관광부장관 결제를 받아 이르면 금주 중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전남도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1 예산 528억원 7개월 만에 집행”

박지원 원내대표 “이르면 금주 전남도에 교부”

박 원내대표는 특히 이 과정에서 유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호영 특임장관 등을 직접 설득하는 등 F1 지원에

도 국토해양부 장관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만나는 등 전방위 노력을 펼친 결과, 목포~부산 간 무궁화 열차가 다음달 9일 일부 운행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목포~부산 간 열차를 1일 2회(왕복 1회) 운행 재개하고 목포~순천 노선의 운행 횟수 축소 문제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표는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강용석 의원 ‘성희룡 파문’ 일파만파

한나라 제명처분...야권 의원직 사퇴 촉구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사진)의 ‘성희룡 발언 논란’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강 의원은 성희룡 발언 언론보도를 정면 부인했지만 한나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제명했고, 야권은 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논란은 중앙일보가 20일 강 의원의 성희룡 발언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6일 제2회 국회외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 20여명과 저녁을 하는 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한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를 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을 또 강 의원이 지난해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한 여학생을 향해 “그때 대통령이 너만 쳐다보더라” “남자는 다 똑같다.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옆에 사모님(김윤옥 여사)만 없었으면 네 (휴대전화) 번호도 따졌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가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강 의원과 한나라당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강 의원은 당사 못 벗고, 한나라당은 강 의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강용석 징계요구안’을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잇을 만하면 터지는 한나라당의 성폭력 사태는 반역성적 성폭력이



일상화된 한나라당의 정당 문화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강 의원 출당 등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즉각적으로 제명 조치를 취하는 등 파문 확산을 차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주성영 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두 차례나 윤리위원회를 연 결과, 강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제명은 한나라당 징계 종류 중 가장 엄중한 것으로, 의원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면 5년 내에 한나라당 재입당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적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정치생명을 걸고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여학생과 오늘 통화해본 결과, 그 여학생은 그런 발언(여성비하 발언)을 들은 적도 없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 관련 부분도 여학생이 청와대 초청 만찬에 다른 대학생과 참석할 사실이 있어 그때 얘기를 하다 대통령이 그 학생에게 대학교와 전공을 물었던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라며 “기사와 같은 내용을 말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건평·박정규·서청원·김우중 등 정·재계 인사 청와대 부인 불구 8·15 특사설 술술

청와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재계 인사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특사 대상으로 검토 중인 인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씨와 박정규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 김우중 전 대구그룹 회장 등으로 알려졌다. 6·2 지방선거 패배 이후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참여정부 인사 뿐만 아니라 현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던 정치권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론 대상자 가운데 노 씨와 박 전 수석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노 전 대통령 측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와 함께 친 박근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서 전 대표는 2008년 4·9 총선에서 공천 현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김 전 회장은 추징금 피하기 위해 1천억원대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이 대통령이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된 형의 효력을

소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에서는 특별사면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청와대에서도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특별사면설을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팩트(사실)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며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할 수 있지만 청와대 차원에서 사면을 공식 논의할 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이종훈의 뉴스쇼’에 출연, “노건평씨의 경우 대통령 권력주변 비리인 만큼 노 씨 사면론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노씨 사면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김우중 전 대구그룹 회장의 경우 국민감정상 용서해 주는 게 이르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2008년 4·9 총선에서 공천현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에 대해서 “그동안 정치권행과 국민여론을 잘 헤아려 (사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옳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이 여행사

234-3222

남전 SHOW-월 549,000-

남전 SHOW-월 579,000-

남전 SHOW-월 629,000-

남전 SHOW-월 699,000-

신로

조이에서 특별한 선택을 기대하세요

399,000

549,000

538,000

대우

119,000

175,000

159,000

299,000

289,000

279,000-309,000

183,000

국민중간대

★안산의 작업장★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베트남 노골보다야 작업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